민주, '쌍끌이 특검' 전략… '김건희 상설특검' 추진

'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제출
대통령 특검 임명 여부 관건
"뻔뻔한 순방에 예산 낭비해"
국힘 "정쟁 혈안…특검 중독"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주민·김승원 의원이 지난 8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 추진을 본격화 하기로 하는 등 '쌍끌이 특검' 전략을 꺼내들었다.

9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의혹 일부를 다룰 '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별적인 특검법 발의가 아니라, 지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임명법)에 따른 특검수사요구안이다.

요구안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지난 6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8가지 수사 대상보다 범위가 줄었는데, 앞으로 재발의할 '특검법'의 대상이 아닌 의혹들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부대표는 "개별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은 병행하는 개념"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건들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상설 특검 역시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기 때문이다. 임명을 무한정 미뤄도 야당 입장에선 마땅히 돌파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민주당은 상설특검이 윤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2명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만약 임명을 거부하면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가 앞장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불통·폭주 프레임'을 부각한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뻔뻔한 순방에 예산 낭비를 멈추고 김건희 특검으로 의혹을 밝혀라"고 비판 강도 수위를 한층 높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공천개입 명태균, 주가조작 이종호, 김대남과 녹취록 속 십상시까지, 그들이 품고 있는 의혹도 갖가지다. 앞으로 나올 또 다른 십상시에 비선실세는 도대체 몇 명이냐"며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음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정쟁에만 혈안 된 특검 중독"이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이나 사법 정의는 안중에도 없다"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인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 배제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놓은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곡성 온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방문해 10·16 재보궐선거 곡성군수에 출마한 최봉의 후보와 유세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장세일 "'벼멸구 피해 농가 구제' 중앙당과 긴밀 협력"

더불어민주당 장세일(사진) 영광군수 후보가 벼멸구 피해 농가 구제를 위해 중앙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9일 밝혔다.

장 후보에 따르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문금주 의원의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가' 질문에 "농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8일까지 생긴 벼멸구 피해에 대해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최근 벼멸구 피해 현장을 둘러본 신정훈 의원은 "중앙당과 민주당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영광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생계비 등 여러 재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당과 긴밀하게 협력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이석하 "어민지원대책으로 서민 부담 완화를"

이석하 진보당(사진) 영광군수 후보는 지난 8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정부지원 확대와 어민부담 완화 약속'을 이끌어 냈다며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후보는 "영광 군민들이 군수 재선거 만큼 국회 첫 국정감사도 관심이 많다"며 "전날 진보당이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대책을 이끌어 냈다. 전남은 전국 양식 생산량의 76.4%를 차지하면서도 재해보험 가입률은 불과 35%에 불과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앞서 전종덕 의원은 국감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산물 재해보험에 내는 보험료는 많은데 재난지원금보다 보상액이 적으며 1년이면 사라지는 소멸성 보험이라 위험성이 크다"며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고 가입률 제고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현 기자

'광주공공배달앱' 국감서 화제… 공공앱 활성화 건의

시, 참고인 출석…운영성과 등 증언
"정부 지원으로 배달앱 횡포 막아야"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횡포로부터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광주공공배달앱'이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광주공공배달앱 운영 실태와 성과, 한계 등을 증언했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대표해 국감에 출석한 이 부시장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국회 입법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민간배달앱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96%이고, 공공배달앱은 4% 정도이다. 중기부가 현재 방식으로 배달료 2000억원을 지원하면 이 중 96%는 배달의민족 등 민간배달앱으로 가게 된다"면서 "이는 배달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왕 정부예산을 투입하려면 공공배달앱에 지원해 민간배달앱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평균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3.87%인데 반해 광주는 17.3%를 차지한다. 이렇게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2021년부터 연간 적게는 5억원, 많게는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며 "그 결과 광주는 공공배달앱에 총 4년간 43억원을 투입해 47억원의 중개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공공배달앱이 17.3%까지 높아진 것은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한 결과다. 앞으로 20%, 25%까지 끌어올리려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크다.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려면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배달앱 독점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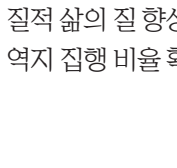
이 부시장은 '배민(배달의민족) 독립운동'도 소개했다.

지난 8월 한달간 광주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착한소비·가치소비를 하자며 '배민 독립운동'을 호소했는데, 캠페인 결과 매출액과 주문건수가 17%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 지자체, 언론 등이 함께 공적 캠페인을 전개하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노병하 기자

민형배 "정부 광고 집행 비율, 지역신문 홀대 심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사진)은 9일 "정부 광고의 전국지 집행 비율은 증가하고, 지역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신문 활성화로 지방분권, 지역 소멸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지 및 지역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지에 투입된 정부 광고는 전체의 54.0%인 1226억 6400만원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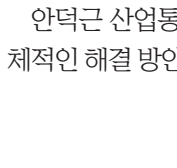
2023년에는 57.3%인 1370억15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8월말 현재 817억6300만원으로 58%를 차지했다.

반면, 지역지가 정부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 추세다. 지역지는 2022년에 정부 광고의 46%인 1046억3300만원을 수주했다. 2023년에는 42.7%인 1019억61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8월말까지 광고액은 42% 인 591억2900만원에 불과하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영남 소재 지역지가 수주한 광고액은 1009억원이다. 이에 반해, 호남 지역지 광고액은 335억1500만원에 그쳐 영남지역의 3 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남 지역지는 충청지역보다도 150억원 이상 광고 수주액이 작았다.

민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공론장으로 지역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정부 광고의 지역지 집행 비율 확대를 요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서왕진 "호남 재생에너지 산업 위기… 대책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왕진(사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대책으로 신규 발전 허가가 중단되면서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호남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호남은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어렵게 찾아낸 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은 지역 홀대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과 달리 광주는 전력 계통 연결 여유 용량이 충분한 만큼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호남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적극 배치하면 계통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포함한 전략적 구상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안한 내용은 검토한 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지현 기자